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42호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junani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4·16세월호참사 진
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 조성·운영
2.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에 관한 문화사업
3.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교육
4.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 사회 조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